

환경개선을 위한 민주시민의 역할분담

成 稷 燮

한국과학기술원교수

민주시민 사회란 인간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이 최대한 보장된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역할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뒤따르는 규범, 즉, 만물의 존재논리가 인정되고 존중되는 가운데 부여되는 권한의 발휘만이 번영을 약속받는다 할 수 있는 바다. 종교차원에서 살펴볼때 만물은 함께 살고 함께 존재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환경측면에서의 시민적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오염없는 환경의 보존이 생태계의 근본적 존재논리에 입각하여 범 국가적으로 반드시 중시되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상과 같은 생태계의 필연적 보존을 염두에 두고, 최소한 환경오염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산업사회활동을 전개해야 마땅한바, 그 활동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여 논의할 수가 있겠다. 그 첫째는, 기존 생태계의 파괴여부를 분별해 가면서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이며, 두번째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제공물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사회활동의 병행을 고려할 수 있겠다. 세번째로는, 결과로 빚어지는 환경오염물들의 양적·질적 감소를 위한 재처리활동이라 하겠다. 이 모두가, 민주시민의 올바른 인식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행위적 활동을 자제하도록 시

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환경보존을 위해 요청되는 자발적인 노력은 공동생활의 보편 타당 논리를 존중하는 바가 될 것이며 스스로의 보존을 위하는 일로 깨우쳐져 어떤 사회적 규범으로도 얻을 수 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영원한 삶의 믿음이 확고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보존을 위한 민주시민들의 자발적인 역할이 고귀하고 시급함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그 유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의 마련없이는 동기부여가 스스로 일깨워지기 어려우므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만 의존할 경우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힘들때가 많은 것이 또한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지만, 세상 만사에는 모두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취합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타당하게 반영해야 그 성취효과가 더 높아 지는 바, 이러한 일련의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매체, 즉, 동기부여가 주어질때 비로소 크게 그 효능 발휘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적절한 행정시책을 통한 동기부여로 민주시민의식이 고취되게 하고 각 시민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해야 함이 시급하다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도시행정에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를 대상으로 몇가

지 행정차원의 체계적 제도방안들을 제안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다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하고, 민주시민의식의 발효를 가속화시키게 하는 차원 높은 기대효과를 예시하여, 여타 환경관련과제들의 해결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현재, 생활쓰레기의 수집후 분류처리나 분리수거후 처리하는 방법들에 의한 행정추진으로 그 시행효능이 여의치 않음을 듣고 있는 바다. 오히려, 쓰레기를 유발하는 원인행위나 그 행위물질을 원초적으로 감소(제거)시킨다면, 환경보존효과는 크게 드높여 지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있는 그대로 재사용 가능한 물체들인데도 쓰레기로 혼합수집한 이후에 다시 분류하여 소각하거나 매립폐기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원의 낭비가 이만 저만이 아닌 셈이다. 비록, 폐기 대상물체들이라도, 위와같은 환경오염 대처방법은 많은 인력과 장비의 동원이 요구되고 복잡한 기술의 개발이 뒤따라야 하는 바, 생산성이나 경제성 차원에서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는 방법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우선, 중요 생활쓰레기 물체들인, 신문지, 채소 폐기물, 캔이나 빈병들을 대상으로, 유도적 행정시책의 마련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엮어 낼 수 있는 「원인제거를 위한 협동」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차원 높은 시민의식의 고취를 위한 시범시책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도시 채소쓰레기의 경우, 그 원인 제공자는, 채소밭에서 운반해 오는 트럭이라 하겠다. 그런데, 채소를 운반해 온 트럭은 채소를 시장에 불하한 후에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더우기, 채소쓰레기는 채소밭의 좋은 퇴비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재사용됨이 없이 다른생활 폐기물과 섞여 도시쓰레기로 변하며 도시쓰레기로 수집된 후 다시 분류되는 낭비적 폐기체인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낭비적 과정의 시정을 위한 행정시책이 적절히 마련될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즉, 모든 채소 트럭은 채소를 반입한 후, 빈 트럭으로 되돌아가는 대신, 반드시 채소쓰레기를 해당 채소밭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마련하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자발 의식과 행정 제도책이 엮어낼 환경보존의 현실적 역할 분담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시민의 여타 환경오염 퇴치를 위한 스스로의 더 큰 역할 확장을 유도하는데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신문지의 경우, 각 집앞에 분리되어 버려진 폐신문을 수집회사의 운영으로 수집토록 할 때 경영차원의 보증이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폐신문의 원인 제공자가 신문 배달인이라고 할때, 신문배달과 동시에 각 집앞에 놓여진 폐신문을 수집하여 각 신문 보급소로 되돌려지게 하고, 다시 해당 신문사와 제지회사로 되돌려지게 하는 행정시책을 펼때, 환경보존은 물론 자원의 이용효율에 대한 시민의식의 고취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빈병이나 캔등과 같은 공산품들도 각 소매점별로 수집되고, 다시 도매상에게로 되돌려지고, 공장으로 되돌려지는 행정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때 환경오염 퇴치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타 많은 소비재 또는 산업용 상품이나 자연생태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상복귀적 행정시책」을 과감히 추진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상복귀적 행정시책을 펼칠때, 완전 복귀는 불가능할진대, 자연 손실물을 감안하는 지혜의 동원이 필요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는 바다.

끝으로, 민주시민의 올바른 인식을 깨우쳐 자발적으로 역할 분담토록, 생활과 직접 연계된 생활쓰레기 과제를 시범 과제로하여 행정시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여타 대상과제들에 대해서는 선정과 확장을 위한 면밀한 연구분석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행정시책을 펼칠것을 제안한다. 이로인해, 시민의식의 고취는 물론 자발적 참여를 위한 유도효과를 더 높일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